“끊임없는 관심이 문화재 지킨다”

긴급 점검– 불교문화재가 위험하다

① 문화재 특별 점검을 통해 본 성보관리 실태
② 흔들리는 불교 건축문화재 보존 대책은
③ 아직도 부실 위험, 예방적 보존 ‘방재’

E등급을 받은 보물 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8월 7일 발표한 특별점검 결과는 불교문화재 중 건축문화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수백년 전 만들어져 자연적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인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특히 이러한 훼손 정도는 사지에 방치돼있는 불교문화재에 집중돼있다. 사찰의 전각과 사찰 경내 문화재의 경우 스님들과 불자들이 상주하며 일정수준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지의 경우 이 같은 기본적인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물 이하 문화재로 갈수록 더욱 도드라진다. 시도지정문화재 중 구조안성성 분야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254건 중 264건이 불교문화재였는데 대부분이 사지와 사지에 있는 문화재였다.

사지의 불교문화재의 경우 풍화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이끼류 · 지의류 번식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와 F등급을 받은 보물급 불교문화재 92건 중 32건에서 이끼류 피해가 보고됐다. 이번 결과는 이들 문화재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자라는 예산, 불교계 역할 중요

그렇다면 임야에 방치된 문화재, 특히 석조문화재를 관리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보존과학 전문가인 전광룡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야외에 있는 건축문화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정부가 도입하는 문화재 관리사, 문화재 지킴이 등의 영역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끼 · 지의류는 화학제거 시 훼손부분이 더 많기에 물리적 제거가 답”이라며 “사찰문화재가 상태가 나은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리주체인 전국 16개 지자체 중 10개 시도가 아예 정기조사 규정이 없는 등 제도의 허점있기에 시민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D등급이하 불교문화재
대다수가 사지 유적
불교 · NGO 관심으로
지속적인 관리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전담부서 설치에 맞춰 불교계 자체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야 한다. 결국 불교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이다. 성지순례 등을 활용해 문화재 보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가신도들에게도 문화재 보호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종단기구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연구와 보존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서산 마애불의 경우 보호각 설치 이후 오히려 풍화가 빨라지고, 훼손이 심각해지는 등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건축문화재의 경우 암질에 따라 보존처리가 달라진다. 개별 문화제에 맞는 연구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전자화 · 통합화를 추진하며 현장 전문인력인 ‘문화재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불교계에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사업에 선정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가 8월 19일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협약을 교육 및 상시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으며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조사 결과 중 사지 내 문화재 현황과 보존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대불청을 불교 문화재 지킴이 대표단체로 키워가겠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축적한 문화재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활발한 지킴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못다핀 꽃’의 그림… 교황에게 선물

나눔의 집 할머니, 18일 명동성당서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8월 18일 교황이 서울 명동 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 할머니들은 교황에게 고 김순덕 할머니(1921~2004)가 생전에 그린 ‘못다핀 꽃’〈사진〉을 전달했다.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꽃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이 그림은 김 할머니가 일본의 만행과 피해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1995년 완성했다.

나눔의 집 측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고 계신 할머니들을 대신해 교황에게 그림을 선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황 집전 미사에 초대된 위안부 할머니는 김군자(88), 이용수(87), 강일출(86) 할머니다. 할머니들은 “교황께서 우리말을 듣고 국제 사회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외국 주요 인사들에게 이 그림을 선물해왔다.

한편 8월 14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역대 최초로 광복절을 맞이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위안부역사관 등을 살펴봤다. **배현진 기자**

만해 스님의 빛 북극성처럼 길 비추네

‘청년만해’ 만해축전, 8월 11~13일 … ‘나눔의 집’ 등 수상

2014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만해 평화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강제 징용 조선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유와 평화, 자비사상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힌 만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사회 곳곳에서 인류평화와 화합에 기여한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해축전이 8월 11~13일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열반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전은 ‘청년 만해’를 주제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고찰하고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만해마을을 기증받은 동국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동국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젊음의 장이 만들어졌다.

특히 11일 열린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만해축전의 백미였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1000명이 행사장에 모였다.

만해대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을 비롯해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온 이세중 변호사, 쌍용차 해고노동자 돕기 캠페인인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비롯해 세계평화와 종교역할 등 휴머니즘 영화를 만든 모흐센 마흐말바프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해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활동가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만해축전 시상식에서는 특별한 축하메시지가 함께 전해졌다. 교황 방한을 앞두고 前만해대상 수상자인 드봉 르네 주교와 김성수 주교가 축전의 성공 개최와 사회 평화에 힘을 모으자는 축전을 보내으며 조선불교도연맹도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통해 ‘겨레가 힘을 모아 평화구축과 통일에 힘쓰자’는 축전을 전해왔다.

지구촌 소외계층 보살핌 주목
‘나눔의집’ 평화대상 받아
동국대 청년불교학교 큰 인기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상을 받은 활동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잡고’ 고광헌 대표는 “만해 스님의 사상이 활동가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며 “이번 상 수상으로 시민들의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일출 할머니 등 나눔의집 할머니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군속에 대한 보살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신경림 작가를 교장으로 6월 28일 청년만해학교, 청년만해 비보이대회 등이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본행사장에서도 젊었을 때의 만해 스님의 사진과 발원 등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기도 했다.

행사는 10일 사전행사 학생시낭송대회를 시작으로 11일 만해 스님 열반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와 시낭송회, 제12회 유심작품상 시상식, 전야음악회가, 12일 제16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유심시조아카데미 학술세미나 등이 이어졌다. 13일과 14일에는 다문화가족예술제와 인제문화예술대동제, 창작21작가회가 마련한 평화시낭송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져 대미를 장식했다.

인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現 이주민 정책은 인권 유린 제도”

4대종단 인권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철폐 주장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진오, 이하 마주협)를 비롯한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들이 시행 1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를 규탄했다.

마주협 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등은 8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용허가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만 골몰하고 있는 제도”라고 규정하며 “이주노동자를 간편한 도구이자 값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처 변경 금지와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게 한 제도다.

회일 스님(마주협 공동대표)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대접받지만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위안부 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며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황의 방문을 환영할 자격이 없다”며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